

##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(안)

- ‘안전한 나라’ , ‘인권 존중 사회’ , ‘실용 법무행정’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
-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(0.1조→0.8조),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 뒷받침

- 법무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(안)의 총지출은 5조 4,056 억원으로 2026년 4조 7,046억원 대비 14.9%(+7,010억원) 증가하였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.2%(+6,896억원), 교도작업특별회계 5.5%(+43억원),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.9%(+70억원) 증가하였습니다.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        |             | 2026년<br>예산(A) | 2026년<br>추경 | 2027년<br>정부안(B) | 전년대비(B-A)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증△감       | (%)  |
| 총지출(A+ B)   |             | 47,046         | 47,053      | 54,056          | 7,010     | 14.9 |
| 회<br>계<br>별 | 【예 산(A)】    | 46,019         | 46,026      | 52,958          | 6,939     | 15.1 |
|             | ○ 일반회계      | 45,235         | 45,242      | 52,131          | 6,896     | 15.2 |
|             | ○ 교도작업특별회계  | 784            | 784         | 827             | 43        | 5.5  |
|             | 【기 금(B)】    | 1,027          | 1,027       | 1,098           | 71        | 6.9  |
|             | ○ 범죄피해자보호기금 | 1,027          | 1,027       | 1,098           | 71        | 6.9  |

- 2027년 예산안은 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, ②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, ③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조정실    | 책임자 | 과 장 | 강익곤 | (02-2110-3766) |
|       | 기획재정담당관실 | 담당자 | 서기관 | 유재륜 | (02-2110-3098) |

##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

- 교정시설 확충·개선으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,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도작업장 신축으로 교정·교화 기능 정상화 **(+17,160백만원)**
  - ※ 유희 수용동 환경개선 ('26) 0 → ('27) 12,945백만원(순증)
  - ※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연구용역 ('26) 0 → ('27) 735백만원(순증)
  - ※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도소 작업장 신축 ('26) 3,094 → ('27) 6,574백만원(+3,480)
- '소년보호전문기관' 운영 및 재범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**(+29,664백만원)**
  - ※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조성 및 교육 운영 등 ('26) 0 → ('27) 26,043백만원(순증)
  - ※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·정신질환 관리강화 ('26) 1,226 → ('27) 4,847백만원(+3,621)
- 교정시설 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AI 계호시스템 도입 및 보호관찰대상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관리·감독체계 강화 **(+12,895백만원)**
  - ※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, AI 기반 생체감지 레이더 ('26) 0 → ('27) 10,811백만원(순증)
  - ※ 1:1 전자감독 확대 및 현장감독 강화 ('26) 7,573 → ('27) 9,657백만원(+2,084)
-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치료·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보호관찰대상자 마약검사 강화를 통해 마약범죄 재범방지와 완전한 단약 지원 **(+957백만원)**
  - ※ 마약 전담 교정시설(마약사범 전용 교육실 등) 구축 ('26) 531 → ('27) 1,151백만원(+620)
  - ※ 마약사범 수사·불시 검사 강화 ('26) 175 → ('27) 512백만원(+337)

## 2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

- 주요 과거사·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 **(+695,165백만원)**
  - ※ 국가배상금 ('26) 144,835 → ('27) 840,000백만원(+695,165)
-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·파산·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추진 **(+4,031백만원)**
  - ※ 금융취약계층 개인회생·파산·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('26) 7,639 → ('27) 9,765백만원(+2,126)
  - ※ 위기 채무자 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('26) 0 → ('27) 1,905백만원(순증)

-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권 등 강화 (+4,983백만원)

- ※ 임시안전숙소 단가 현실화 및 지원물량 확대 ('26) 942 → ('27) 1,236백만원(+294)
- ※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이전비 확대 ('26) 200 → ('27) 252백만원(+52)
- ※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가 배치 ('26) 5,551 → ('27) 6,661백만원(+1,110)
- ※ 범죄피해자 생계 안정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확충 ('26) 11,636 → ('27) 14,046백만원(+2,410)
- ※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 주말·야간상담 전국 확대 ('26) 11,410 → ('27) 11,972백만원(+562)
- ※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('26) 0 → ('27) 555백만원(순증)

-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 편의지원 강화 (+65백만원)

- ※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음성파일 제작 ('26) 0 → ('27) 26백만원(순증)
- ※ 문제출제·시험집행시 점역요원, 점역프린터 등 인력, 장비 배치 ('26) 0 → ('27) 39백만원(순증)

### 3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

- 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·분석하고, 후속·파생절차 대응기반 확충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 고도화 (+326백만원)

- ※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 ('26) 0 → ('27) 124백만원(순증)
- ※ 후속·파생절차 대응 및 전문인력 증원 ('26) 0 → ('27) 202백만원(순증)

- 지역·산업 현장 맞춤형 외국인 인재를 적시·적정 규모로 공급하고 외국 관광객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(+1,664백만원)

- ※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1개소 운영 ('26) 0 → ('27) 1,463백만원(순증)
- ※ 크루즈 관광객 입국전 선상심사 확대 : ('26) 99 → ('27) 300백만원(+201)

- 외국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국어·한국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공급 확대 (+3,136백만원)

- ※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주말반 등 교육 공급 확대 : ('26) 13,640 → ('27) 16,776백만원(+3,136)

-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,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 출입국·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(+15,055백만원)

- ※ AI 기반 고위험 승객 차단 및 자동출입국심사 개편 등 정보화전략계획(ISP) 2건 수립 ('26) 0 → ('27) 674백만원(순증)
- ※ AI 기반 출입국·이민행정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 ('26) 0 → ('27) 14,381백만원(순증)